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우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7 / 전화 (02) 738-6897 / 전송 720-2033

문서번호 국행삼 02020 - 157

시행일자 1994. 7. 18 (5)

수신 수신처 참조

선결			지	
집	일 자		시	
수	번 호		결	
처 리 과			재 · 공	
담 당 자			람	

제목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특별지시(국무총리지시 제1994 -21호)

8월 2일 실시되는 3개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 처음 적용되는 선거인만큼 종래의 구태의연한 불법·탈법 선거풍토가 일체 사라지고 깨끗한 공명선거의 새로운 전통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강조 지시하니,

각 부처청에서는 모든 선거관리에 엄정을 기하고 소속공무원과 산하기관에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철저히 주지시켜 새로운 선거혁명과 선진정치개혁의 기틀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가. 각부처의 장은 장·차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보궐선거지역에 출장 또는 방문을 금지토록 하고, 보선지역에서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사와 시책확인·감사등도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나. 내무부장관은 보선지역의 자치단체장등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주지시키고, 특히 통·리·반장, 예비군 지휘관, 국민운동 단체 임직원등의 선거관여 오해가 일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훈령 제 312 호(94. 5. 31)

내 의거 례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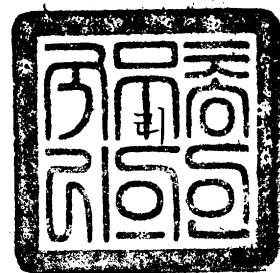
다. 법무부장관은 법에 보장된 정당한 선거운동은 철저히 보호하되,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신분여하를 불문하고 예외없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선거종료후에도 끝까지 추적 관리할 것.

라. 내무부장관과 공보처장관은 정당·후보자·선거운동원은 물론이고 유권자까지 새 선거법의 규정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선거법의 내용과 정부의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끝.

국

무

총







국무총리행정조정실

우-10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77 / 전화 (02) 738-6898 / 전송 720-2033

문서번호 국행삼 02020 -

시행일자 1994. 7. 18. ()

수신처 참조

취급		행정조정실장	국무총리
보존	5년		
조정관			
심의관			
서기관	노장택		
기안	정경진		
		협조	

제목: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한 특별지시 (국무총리지시 제1994 - 21 호)

8월 2일 실시되는 3개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이 처음 적용되는 선거인만큼 종래의 구태의연한 불법·탈법 선거풍토가 일체 사라지고 깨끗한 공명선거의 새로운 전통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강조 지시하니,

각 부처청에서는 모든 선거관리에 엄정을 기하고 소속공무원과 산하기관에 확고한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철저히 주지시켜 새로운 선거혁명과 선진정치개혁의 기틀이 확고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가. 각부처의 장은 장·차관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보궐선거지역에 출장 또는 방문을 금지토록 하고, 보선지역에서의 각종 행사와 시책확인·감사등도 선거기간 중에는 실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나. 내무부장관은 보선지역의 자치단체장등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한다는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주지시키고, 특히 통·리·반장, 예비군 지휘관, 국민운동 단체 임직원등의 선거관여 오해가 일체 없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

훈령 제 312 호 (95. 5. 31)
에 의거 폐지

다. 법무부장관은 법에 보장된 정당한 선거운동은 철저히 보호하되,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지위고하, 신분여하를 불문하고 예외없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며, 선거법 위반사범에 대해서는 선거종료후에도 끝까지 추적 관리할 것.

라. 내무부장관과 공보처장관은 정당·후보자·선거운동원은 물론이고 유권자까지 새 선거법의 규정을 철저히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선거법의 내용과 정부의 공명선거 실천의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 끝.

국 무 총 리

수신처 가 07~57